

수 신 지방-97-0606

발 신 지방자치담당 정책부장 김민영 (796-8364, 6월 30일 이후 723-5300)

제 목 내무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10대 과제에 대한 참여연대의 논평

날 짜 1997. 6. 27. (총 2 쪽)

## 보 도 자 료

### 민선자치 2년, 지방분권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 내무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10대과제에 대한 참여연대의 논평

6월 26일 강운태 내무부장관은 민선지방자치 실시 2년에 즈음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지방자치 발전방안과 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방분권화, 지방재정 자립성제고, 주민참여제도 확대 등 10개 발전방향과 그 추진계획 등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는 내무부의 발표내용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먼저, 내무부의 발표내용이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부족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발전을 질곡하는 핵심적인 문제인 자치권 확대에 관한 구체적 대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지방교부세를 상향 조정, 국세와 지방세간 합리적 조정, 포괄보조금제도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 없이는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더구나 주민투표법이나 주민발안제, 감사 청구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이 예고되어 왔던 정책에 불과해 새로운 발전과제라

보기는 어렵다.

## **둘째,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중앙통제적 사고를 버리지 않고 있다.**

한편 내무부의 발표내용 중 우려되는 점은 지방행정의 탈정치화로 생활자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정부여당이 주장해왔던 기초자치단체장 공천배제나 임명제 전환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이라는 것도 역시 자치단체별로 성적표를 만들어 정부가 주장해왔던 국고지원 인센티브제도 활용을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인센티브제도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자기 입맛에 맞는 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중앙정부의 정책에 맞서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런 일련의 정책은 중앙정부가, 특히 내무부가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새로운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며, 여전히 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중앙통제적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셋째, 위험천만한 전자주민카드제도 추진에 대해서는 제고해야한다.**

그리고 현재 불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으며,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들에 의해 그 공공성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도에 대해서, 내무부가 시행을 강행한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주민카드제도는 현재 아무런 관련 법규정도 없는 상태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아무런 심의도 없이 예산이 불법지출되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이제도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사생활침해 등의 위험성이 명백히 예견되는 위험천만한 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파행적 제도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과연 지방자치발전과제로 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 **내무부 개편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참여연대는 누차에 걸쳐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과 아울러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 참여제도를 강화하는 것임을 주장해왔다. 더불어 관치행정의 유물인 내무부의 폐지와 자치부로의 개편이 시급함을 주장해왔다. 내무부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며 중앙통제적 사고에 연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선자치 2년에 즈음해 중앙정부와 내무부의 발상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997. 6. 27

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부소장 李琦雨